

유권자 10명 중 7명 “地選 반드시 투표”...39.4% “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12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단체장 선택 기준 정책·공약·능력·경력 순 73.9% “선거로 국가 미래 달라질 수 있어”

이는 최근 실시한 세 차례의 지방선거 의식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보다도 3.8%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82.7%로 가장 높았고, 50대 (78.8%), 40대 (74.0%), 30대

(67.8%) 순이었다. 만 18-29세 이하는 51.2%로 가장 낮았다.

이번 선거에 ‘관심있다’는 응답은 78.3%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 (77.9%)보다 0.4%p 높았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9.4%로 집계됐다. 지난 지방선거 (45.2%)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1.4%)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낮은 수치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가 39.6%로 가장 많았다.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 (26.4%) ‘선거일에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 (15.6%) 등이 뒤를 이었다.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정책·공약’ (26.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능력·경력’ (25.6%), ‘소속 정당’ (22.8%), ‘도덕성’ (16.9%) 순이었다.

투표를 통해 기대하는 효능감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

다’는 의견에 73.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64.1%가,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79.3%가 동의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CATI)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프레임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89.8%)와 유선전화 RDD (10.2%)를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현장에서 배우는 5·18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5·18인권현장투어가 21일 광주 서구청 주최로 열려 참가자들이 복원된 옛 전남도청 본관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조영권 기자

정진욱 ‘5·18 왜곡 비방·방지법’ 발의

“반역사적 마케팅 재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1일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기업 마케팅에 활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역사적 사실 자체를 교묘하게 부인·비방·왜곡하거나,



스타벅스 사태처럼 조롱·허화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현행 제2조의 제목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변경하고, 허위사실 유포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정진욱 의원은 “개정안은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5·18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단단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AI·반도체·재생에너지 전력 병목 해소 기대

‘민간 송전망 건설 허용법’ 상임위 통과 안도걸 “미래산업 성장 제도 정비 최선”

송전망 확충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망 확충 3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1일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이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 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체계 만으로는 송전망 확충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은 이러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송전사업자 외 민간 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 통과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에 보다 신속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도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개정안은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접속 설비를 공동 구축하고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 개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송전설비 중복 설치를 줄이고 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도걸 의원은 “AI와 반도체,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결국 전력망”이라며 “이번 법안은 한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송전망 확충에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기업이 전력망 부족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광주·전남을 포함한 지역 미래산업이 제때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정준호,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법 발의

국가AI컴퓨팅센터 대비 특례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21일 “솔라시도 유입 주민들의 안정적 거주와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솔라시도(영암·해남 관공래저형 기업도시)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본격화되며 장기간 정체됐던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전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솔라시도를 입지로 제안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운영되는 2029년 이후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종사자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90세대와 리조트형 주택 2천23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기업도시구역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중복 지정할 경우 하나의 토지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중복 지정이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솔라시도 유입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도시 내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남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법’을 발의했다. /김진수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